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투표에 대한 연구

초록

- ◎ 성별에 따른 교차투표는 다른 세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2030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임. 이에 본 연구는 왜 2030 세대에서만 남녀 유권자의 교차투표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여성 유권자의 전반적 투표행태와 더불어 세대별 투표행태 양상을 살펴봄.
- ◎ 2010년대 중반 이후 ①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여성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 ②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 담론이 2022년 선거에서 정당과 유권자를 통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연구결과, 여성 유권자가 투표에 있어 집단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공직후보자는 양성평등 의식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한다'는 남녀 유권자의 반응은 더 이상 선거에서 젠더를 대립 이슈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함.

배경 및 문제점

- ▶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별에 따른 교차투표가 2030 세대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러한 현상이 40대 이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남녀 유권자의 교차투표가 2030 세대에서만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치참여 방식의 차이와 특징을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전반적인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양상을 살펴봄.
- 구체적으로 한국의 젠더 갈등 양상이 2030 세대의 투표행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2030 세대의 성평등 의식이나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젠더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함.

주요 선거에 나타난 여성정책 공약

- ▶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표된 4개 원내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은 정당에 관계없이 대체로 저출생·가족 돌봄과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수를 차지함.
- ▶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정책은 성범죄 대응 및 처리센터와 관련된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2021년 재·보궐선거의 새로운 기류로 서울시장 후보 12명 중 군소정당 5곳에서 페미니스트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성평등, 불평등 해소, 노동권 보장, 기후변화 대응, 성 소수자 존중, 동물권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 ▶ 20대 대통령 선거의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관련 공약을 4개 원내정당과 득표율 3순위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여성 관련 공약은 기존 선거와 유사하게 영유아 등 가족돌봄, 출산지원정책, 젠더폭력 대응 정책, 한부모 등 가족정책,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
-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이에 반대되는 ‘성평등부 설치’, ‘아동청소년부 설치’ 등 여성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남녀 유권자의 세대별 지지 후보 결정요인과 정책투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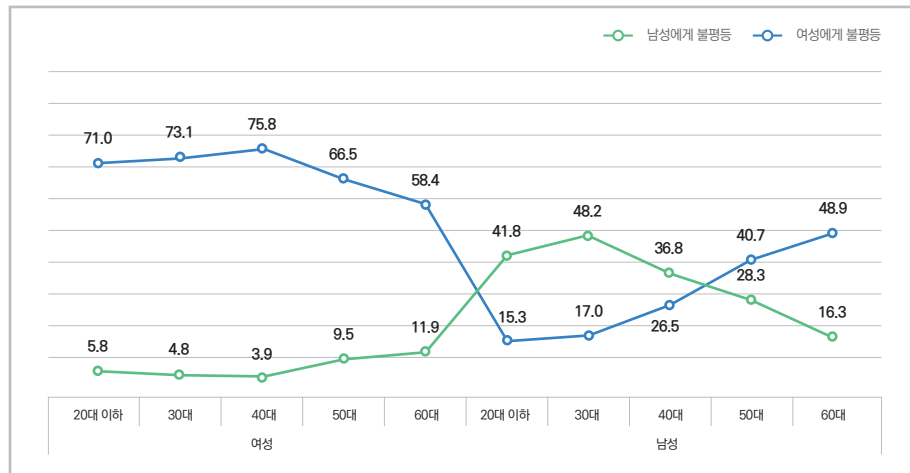
- ▶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시도 만 19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유권자 3,000명(여성 1,474명, 남성 1,5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설문내용은 정치 참여, 대통령선거 관련 투표 태도, 지방선거 관련 투표 태도, 여성정책 관심도 및 의견, 성평등 의식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함.
- ▶ 설문조사는 SPSS statistics 26을 활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특히 각 문항별로 성별, 세대별, 정치 성향별 하위 집단의 응답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그룹 간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함.

● 성평등 의식 및 여성정책 관심도

- ▶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했으나,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남성의 33.9%가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여성의 68.7%가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세대 내 성별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1>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 ▶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상의 이슈들로부터 여성과 남성이 성평등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평균 5점 척도)에 대해, 젠더폭력 이슈(평균 여 3.64점, 남 3.41점), 생계와 가사의 책임이슈(평균 여 3.24점, 남 3.19점), 그리고 여성의 정치대표성(평균 여 3.19점, 남 2.89점)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 남성 60대는 남성 20대와 최대 0.63점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 2030과 유사한 수준의 응답을 나타냄.
- ▶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평균 2.78점)과 남성(평균 2.48점)에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은 60대(평균 2.72점)와 남성 20대 이하(평균 2.22점)의 차이도 크게 나타남.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 중 20대 이하 세대에서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정치 및 기업 고위직에 여성비율 확대(1.03점 차이), 성평등 제도 및 의식 문화 확산(1.24점) 항목이었음.
- ▶ 성평등 의식과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성별격차가 나타났는데, 세대별로 성별격차가 큰 세대는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유권자 내에서는 20대 이하와 60대에서 세대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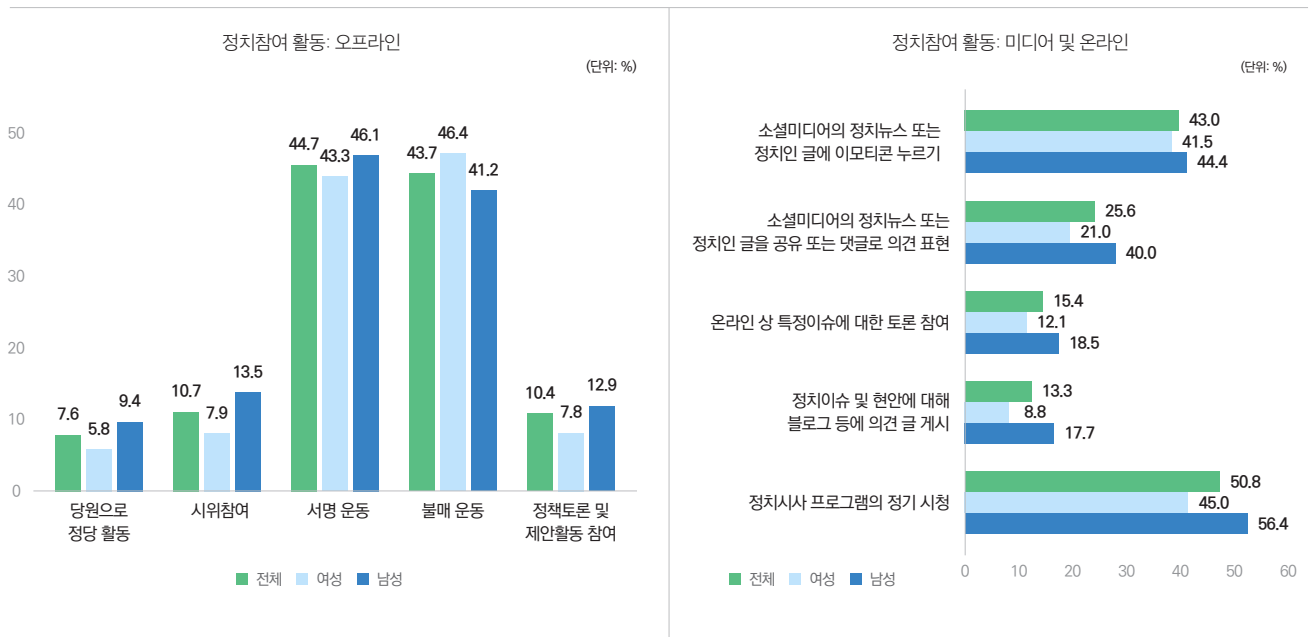
●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

- ▶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 74.3%, 남성 82.3%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별에 관계없이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여성 진보 85.7%, 남성 진보 90.1%).
- ▶ 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 선거(88.0%)>지방선거(73.8%)로 조사되었고, ‘매우 관심 있음’의 성별 응답률 또한 대통령 선거(여성 45.6%, 남성 57.1%)가 지방선거(여성 20.2%, 남성 32.8%)보다 높게 나타남.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보성향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정치효능감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 전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체 74.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치성향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진보성향에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여성 진보 83.5%, 남성 진보 80.1%). 반면 ‘개인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는 것’(35.3%)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이하(여성 40.7%, 남성 46.5%)에서 높고 진보성향에서(여성 37.8%, 남성 38.6%)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오프라인에서 정치참여 활동은 여성응답자의 경우 불매운동(46.4%) >서명운동(43.4%), 남성은 서명운동(46.1%)>불매운동(41.2%)의 순서로 조사됨. 미디어 및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은 ‘정치시사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여성 45.0%, 남성 56.4%), ‘소셜미디어의 정치뉴스 또는 정치인 및 정부기관의 글에 이모티콘을 누르는 정도로 의견을 표현’이 다음으로 높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여성 41.5%, 남성 44.4%).

<그림2> 정치참여 활동

(단위: %)



투표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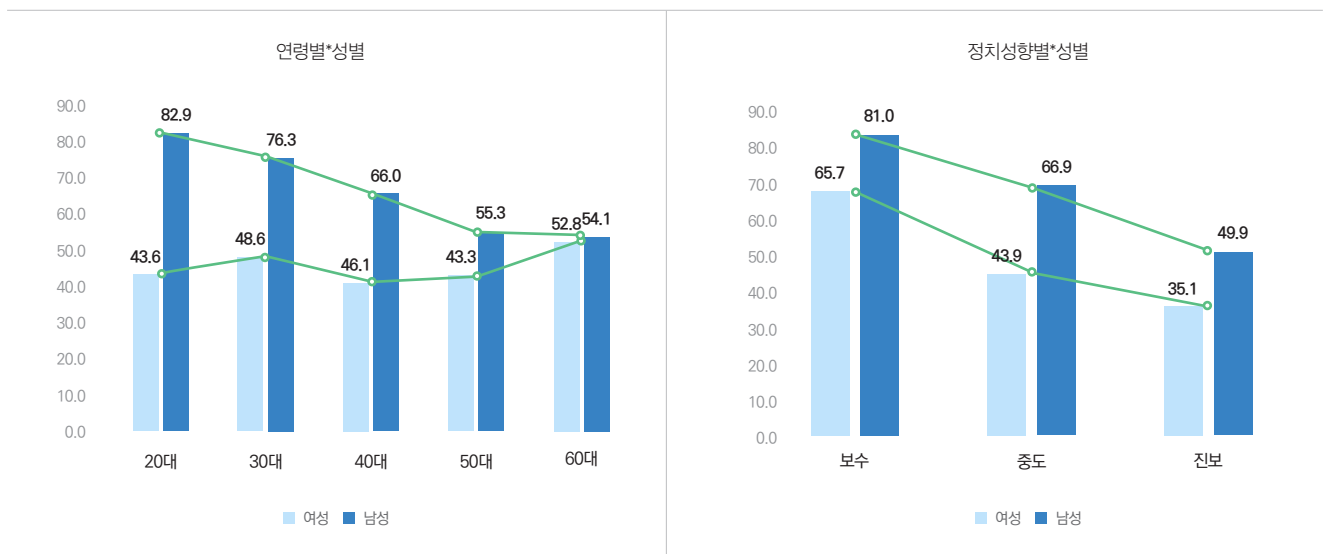
- ▶ 후보 결정 시기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투표 한달 이상 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연령대별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표 한달 이상 전에 결정한 비율이 높았으며, 정치지형별로는 중도층에서 투표 당일과 투표 1-3일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후보 선택요인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 선택한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후보자의 정치성향 및 후보자 정당에 대한 응답보다 많았음. 성별로는 여성(대선 86.3%, 지선 83.0%)과 남성(대선 86.9%, 지선 79.7%) 모두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보수는 정당을, 진보는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선택한 대통령 후보가 어떤 후보였는지 질문에 ‘처음부터 지지했고 당선이 될 것 같아 선택한 후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시도지사 후보는 ‘처음부터 지지했고 낙선했어도 관계없이 선택한 후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 지지 후보가 바뀐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후보의 역량’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별로는 ‘지지하는 정치인의 특정 후보지지’에 대한 응답비율이 여성(7.5%)보다 남성(14.8%)이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18.8%) 및 30대(24.4%) 남성에서 높았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주요 공약에 대한 정책투표

-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요 공약을 일자리/노동, 주거/부동산, 저출산/일생활균형, 여성/인권, 외교/안보, 환경, 정부 조직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동의도에 대한 성별, 연령,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 ▶ 우선 일자리/노동영역의 정책들의 경우, 노동시간 확대와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일자리/노동영역 정책은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음. 주거/부동산 정책의 경우 종부세/보유세 완화는 보수에서, 국토보유세 및 청년기본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이념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저출산/일·생활균형의 경우 초등돌봄 8시간 확대, 부모급여,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의 세가지 정책 모두에 대해 6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정치 성향별로도 60% 이상 동의도를 보여줌.
- ▶ 여성/인권 정책들의 경우 성별과 상관없이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임금격차 해소, 생활동반자 등록법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동의 비율 또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동의비율은 과반이었지만,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이는 여성/인권 관련 정책은 향후 여성주의적 투표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청년세대 내 젠더 갈등이 사회적 인식보다 낮은 수준임을 의미함.
- ▶ 외교/안보 정책들의 경우 사드(THAAD) 추가배치에 대한 동의도는 성별 간, 여성과 남성 청년세대 간, 정치지형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정책의 경우 원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는 성별 간, 여성과 남성 청년세대 간, 정치지형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정치 성향별로 동의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정책 지지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에 더해 추가적인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현재 국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3>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도

(단위: %)



● 투표 참여 및 후보자 결정과정의 변화

-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77.8%로 조사됨(여성 76.9%, 남성 78.6%). 성별에 관계없이 60대가 가장 높았고(60대 여성 83.3%, 60대 남성 90.1%), 20대 이하가 가장 낮음(20대 이하 여성 66.7%, 20대 이하 남성 59.9%). 정치성향별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두 번의 선거에 모두 투표한 비중이 높게 조사됨(여성 진보 85.1%, 남성 진보 86.1%).
- ▶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일괄투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일정당(66.1%)> 2개 정당(26.4%)> 3개 정당(7.5%)로 응답함. 남성(69.9%)이 여성(62.0%)보다 동일 정당 투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3개 정당으로 분산 투표한 비중은 여성(38.0%)이 남성(30.1%)보다 7.9%p 높음.
-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책투표 비율은 대통령(여성 76.2%, 남성 82.3%)>광역자치단체장(여성 55.1%, 남성 58.3%)>기초자치단체장(여성 42.1%, 남성 37.2%) 순으로 조사됨. 즉 대통령과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들이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더 중요하게 보았으나, 기초 자치단체장은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더 중요하게 판단함.
- ▶ 이와 함께 과거 참여한 선거의 투표기준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이 48.6%(여성 50.1%, 남성 47.2%), ‘내 소중한 표가 사표가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률이 49.3%로 가장 높음(여성 49.9%, 남성 48.8%). 여성후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치참여 주체로서 여성 유권자의 부상과 성평등 정치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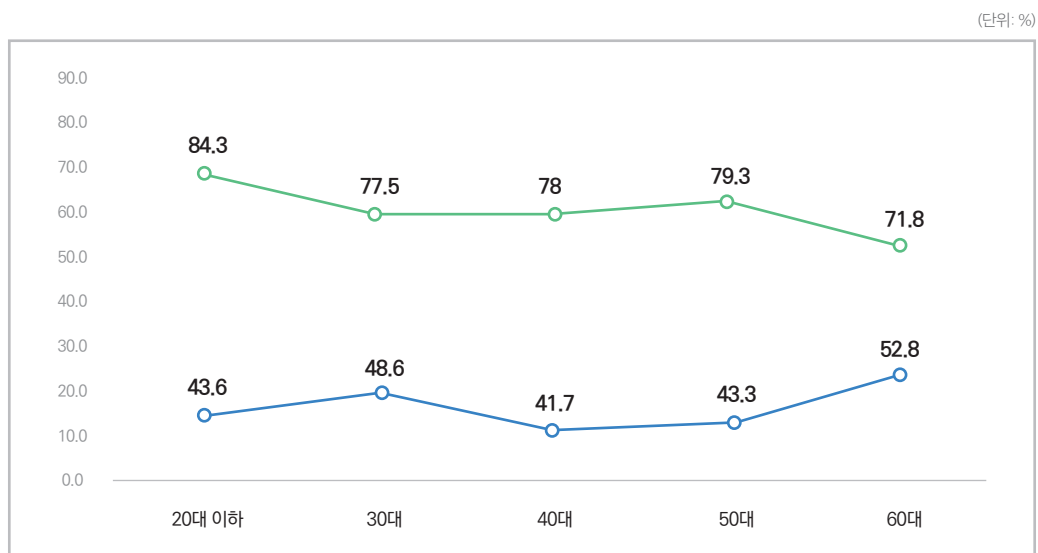
● 남녀 유권자의 후보 결정요인

- ▶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남녀 유권자의 후보결정요인은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후보자의 공약, 이념성향, 정당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별로 고려한 요인을 보면 남녀 2030 세대에서 결정요인의 순서가 바뀌어 작용하였음.
- ▶ 여성 유권자의 경우 자질과 역량 다음으로 후보의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지방선거에서 순서가 바뀌었음. 이러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2030 여성 유권자는 후보 공약에 대해 20대 이하(평균 3.04점)와 30대(평균 3.08점)에서 공약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남성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후보 공약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5060에서 이념성향(평균 3.10점)이 정당요인(평균 3.07점)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남성은 정당요인을, 여성은 정책공약요인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2030 세대 내 성별차이를 통해 다른 결과가 나타남. 2030에서 여성이 정당을 더 고려했고, 40대 이후부터는 전형적으로 남성이 정당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였음.

●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정책투표

- ▶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정책투표에 대한 동의 수준을 보면, 성범죄 강력처벌은 5060세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모두 1순위로 중요하다고 동의하였고, 성범죄 강력처벌과 반대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한 동의는 20대에서 5순위였으나 5060에서는 1순위로 올라옴.
- 성별임금격차해소라는 정책공약은 30대에서 2순위로 가장 동의가 높았고, 40대 이후로도 3순위에 위치했고, 전국민육아휴직제 공약은 역시 30대 여성 유권자에서 3순위로 가장 동의가 높았음. 양성평등정책 기능강화는 20대 이하에서 2순위로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정도의 순위는 다른 정책에 비해 낮아짐.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해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양성평등정책 기능강화 공약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성 유권자 응답을 대조해보면, 2030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43.6%, 48.6%가 나온 것과 동시에, 양성평등정책 기능강화 공약에 대한 동의가 84.3%, 77.5%로 높게 나타났음.
-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를 한 것은 그것이 여성가족부라는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 또는 이해 부족이었다는 것과 양성평등정책 기능에 대한 폐지에 찬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4> 여성 유권자의 정책투표: 여성정책 전달체계 영역



- ▶ 2022년 유권자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하지만, ‘여성’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집행되는 것에 반감이 있었음. 또한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 입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길 바라는 ‘조건부’ 찬성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 및 시사점

- ▶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 후보 결정요인에서 남성은 정당에, 여성은 후보 공약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 그런 만큼 남성에게서는 정당일체감이 나타났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분산 투표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 여성 유권자의 가족(배우자)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 투표 결정요인 중 지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영향을 받은 요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29.1%)보다는 여성(36.7%)이 가족 및 배우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 딸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기혼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남편의 영향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아내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 ▶ 여성 유권자가 성평등의식, 여성정책에 관한 관심, 향후 투표 시 여성정책 고려 정도에서 모두 남성 유권자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음.
- ▶ 20대 여성 유권자의 진보성향과 20 남성의 보수성향이 투표행태에 반영되었지만, 이들의 과거 투표 성향으로 볼 때, 특정 정당에 묶여있지 않은 형태로 투표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투표의 성차가 나타난 이유가 2030 남성의 내재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선거 공학적 측면의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의 선거에는 2030 남성의 표심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임.
- ▶ 결론적으로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따라서 여성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투표행태였고, 여성 유권자가 집단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는 양성평등 의식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한다’라는 남녀 유권자의 반응은 더 이상 선거에서 젠더를 대립 이슈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주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부처 : 국회입법조사처, 정당